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a Korean Open Access Policy

정 철 (Chul Jung)**

정 영 임 (Youngim Jung)***

이 수 상 (Soosang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오픈엑세스 정책의 구성요소 도출 |
| 2. 오픈엑세스의 개념과 발전 양상 | 5. 결 론 |
| 3. 연구 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체계와 국내 학술출판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오픈엑세스 정책문서 9건과 관련 학술논문 13편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는 제목, 적용 시점, 대상 집단, 수립기관, 목표·의의, 사업화, 적용대상물, 집행, 기타(용어 정의, 유관 법제, 연구자의 지원, 권리, 문의 방법)로 도출되었다. 이후 국가 연구비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정책의 수립·이행 주체로 전제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체계 및 국내 학술출판 환경을 고려하여 도출된 구성요소를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에 포함될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의 항목으로 제목, 적용 시점, 목표, 용어 정의, 적용대상물, 의무화, 지원, 집행, 권리, 문의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각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ramework for a Korean open access policy applicable to the research funding syste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and the domestic scholarly publishing environment. To this e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nine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en access policy documents and thirteen related academic articles to identify the key elements of open access policies and their detailed provi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ey elements of open access policies were title, implementation date, target groups, institution, objectives and significance, implementation measures, research outputs in scope, monitoring and compliance, and other provisions, including definitions, relevant legislation, researcher support, right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identified elements were then reorganized into sections of a Korean open access policy framework, with the NRF, Korea's national research funding agency, assumed to be responsible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NRF's research funding system and the domestic scholarly publishing environment. Accordingly, ten sections were proposed: title, implementation date, objectives, definitions, research outputs in scope, open access requirements, support, monitoring and compliance, right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detailed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each section were also specified, and a framework for a Korean open access policy was develope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futur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Korean open access policy.

키워드: 오픈엑세스 정책, 오픈엑세스 정책 구성요소,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 한국연구재단, 내용분석

Open Access Policy, Elements of Open Access Policy, Korean Open Access Policy Framework,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content analysis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추진 방안 연구(정책연구-2025-13)'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박사수료
(feday0000@pusan.ac.kr / ISNI 0000 0005 0660 9447)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acorn@kisti.re.kr / ISNI 0000 0004 5935 5842)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slee@pusan.ac.kr / ISNI 0000 0000 6434 9851)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241-263,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241>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학술생태계에서 오픈엑세스(Open Access, OA)는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픈엑세스의 확산 과정에서 더블 딥핑(double dipping)과 고가의 논문출판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이하 APC)에 따른 연구자의 부담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Rodrigues et al., 2022; Pinfield et al., 2016; 신은자, 2014), 공공 연구비로 생산된 연구성과의 공개를 제도화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왔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2008년 지원 연구성과의 공공 접근을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NIH, 2024), 전세계적으로 국가·주정부, 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민간재단 등 다양한 주체가 지원 연구성과를 공개하기 위한 오픈엑세스 정책을 수립하였다(GF, 2025; UKRI, 2025; BMBF, 2023; NHMRC, 2022; JSPS, 2017; CAS, 2014).

오픈엑세스 정책이 수립된 이후 국외에서는 정책의 이행 수준과 효과를 평가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Larivière와 Sugimoto(2018)는 12개 연구비 지원기관의 오픈엑세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130만 편 이상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공개율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책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집행 수준, 연구성과를 적시에 기탁·공개하도록 하는 시점에 관한 요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리포지터리 등의 인프라가 정책 이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Crowfoot(2017)은 Science Europe 회원기관의 오픈엑세스 정책을 비교하였는데, 정책 간 정합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의 모니터링 및 준수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Bosman et al.(2021a)은 네덜란드의 오픈엑세스 추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이 공개를 확대에 머물지 않고 즉시 공개와 공개 라이선스 등 질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Farley(2025)는 게이트 재단의 10년간 정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PC 중심의 오픈엑세스가 출판비 상승과 연구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를 프리프린트 또는 리포지터리를 통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APC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2025년 정책을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 결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후속 정책 논의와 개정에 반영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픈엑세스 정책이 제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 오픈엑세스 2021(안)」(이하, NRF OA2021)이 제안되었으며(윤종수 외, 2020), NRF OA2021은 목적, 의무화 대상, 의무사항, 오픈엑세스 학술지 논문 출판비용, 저작권,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 기탁,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 운영, 표준화된 연구비 출처 명시, 평가, 적용, 한국연구재단의 의무의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정경희 외, 2020). NRF OA2021이 제안된 이후, 국내 오픈엑세스 정책의 실행 기반과 오픈엑세스 환경의 문제를 검토하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정경희 외(2020)는 APC 지원 규모와 절차, 국내 학술지의 OA 전환 지원 및 리포지터리 기탁 등 NRF OA2021의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경희와 이재윤(2023)은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7개 학술지의 OA 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CCL 미적용 또는 관련 정보의 부정확한 등록, DOAJ 미등록,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과월호 이전 문제 및 출판비 증가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고, 학술지 공동 출판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원식(2021)은 국내 연구자의 오픈엑세스 학술지 선택 기준과 출판 경험 및 인식을 분석하여, 오픈엑세스 출판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국외 비교집단보다 낮음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NRF OA2021이 제안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는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과 관련 연구에서 축적된 논의를 종합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문서와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의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연구재단의 역할과 국내 연구지원 및 학술출판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오픈엑세스의 개념과 발전 양상

오픈엑세스는 누구나 공공 인터넷을 통해 학술문헌에 무료로 접근하고, 저작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저자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을 전제로 읽기, 다운로드, 복제, 배포, 검색 등 합법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정보 공유방식이다(BOAI, 2002). 이는 단순한 무료 열람을 넘어, 학술문헌에 대한 저작권 및 이용허락상의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여 재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ber, 2012).

학술지 구독료 상승과 상업출판사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하여 학술정보 접근이 제약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픈엑세스가 확산되었다(Suber, 2012). 2002년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이니셔티브(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는 셀프아카이빙과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상호보완적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픈엑세스의 기본적인 실현 경로를 정립하였다(BOAI, 2002).

오픈엑세스의 실현에 이르는 일반적인 경로는 그린 OA(Green OA)와 골드 OA(Gold OA)이다(Harnad et al., 2004). 그린 OA는 프리프린트, 저자승인원고(Author Accepted Manuscript, 이하 AAM), 최종출판본(Version of Record, 이하 VoR) 등을 기관 또는 주제 리포지터리에 기탁하여 공개하는 방식이며, 골드 OA는 오픈엑세스 학술지나 출판 플랫폼을 통해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과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골드 OA의 확산 과정에서는 출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주요 방식으로 APC가 활용되어 왔으나, 높은 APC는 연구자와 소속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특히 저·중간소득 지역 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출판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Rodrigues et al., 2022; 신은자, 2014). 한편 하이브리드 OA는 구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APC가 지불된 일

부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학 및 연구기관 차원에서 구독료와 APC 지출이 함께 발생함에 따라 더블 딥핑의 위험이 있다(Pinfield et al., 2016).

이러한 상황에서 Schimmer et al.(2015)은 기존 학술지 구독에 사용되던 도서관의 재원을 오픈액세스 출판 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독 학술지를 완전한 오픈액세스 출판 모델로 대규모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재정 전환을 출판사와의 계약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 전환계약(transformative agreement)이다. 전환계약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컨소시엄이나 개별 도서관 및 기관이 출판사와 체결한 구독계약의 비용을 오픈액세스 출판계약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구독료 기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Read and Publish, RAP)과 출판비 기반 오픈액세스 전환계약(Publish and Read, PAR)으로 구분된다(정영임, 안병균, 2024).

전환계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 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콘퍼런스는 출판사가 전환적·과도기적 오픈액세스 계약을 기본 계약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유료 접근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Max Planck Society, 2023).

한편 APC 중심의 오픈액세스 출판이 저자의 지불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자와 독자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OA(Diamond OA)가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Bosman et al.,

2021b). 다이아몬드 OA는 학회, 대학 및 연구기관, 정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안정적인 재원과 기술 인프라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Bosman et al., 2021b). 이러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DIAMAS 프로젝트는 재정과 거버넌스, 오픈사이언스, 편집 품질과 연구진실성, 기술서비스, 가시성 및 형평성 등을 포괄하는 다이아몬드 OA 표준(Diamond Open Access Standard, DOAS)을 마련하여, 다이아몬드 OA 출판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Consortium of the DIAMAS Project, 2024).

이처럼 오픈액세스의 실현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오픈액세스 정책도 연구성과물의 실현 방식과 시점, 라이선스, 출판처/리포지터리의 요건 및 정책 준수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발표된 Plan S는 참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동료심사 학술출판물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오픈액세스를 요구하였다(cOAlition S, 2018). 이후 마련된 이행지침에서는 저자 또는 소속기관의 저작권 보유와 공개 라이선스를 원칙으로 하고, 출판처와 리포지터리의 기술요건, 출판비용의 투명성 및 정책 준수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cOAlition S, 2019).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국내외 오픈액세스

정책문서와 오픈엑세스 정책 관련 학술논문으로 구분하였다. 정책문서에서는 실제 정책에 반영된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고, 관련 학술논문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고려사항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오픈엑세스 정책문서는 오픈엑세스 정책 관련 학술논문, 문헌 및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국내외 주요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후보군을 수집한 후, 국가별 사례와 정책 주도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정책 주도 유형은 국가 및 공공 연구비 지원 기관,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동 주도, 민간재단, 국제 협의체로 구분하였다. 정책문서의 명칭은 정책(policy),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guideline),

성명 또는 선언(statement/declaration)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문서의 명칭보다는 오픈엑세스의 원칙, 의무, 적용 기준 및 실행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집행이나 후속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근거나 이행 수단 없이 향후 목표와 방향만을 제시한 계획 문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으며, Plan S는 국제 협의체인 cOAlition S가 제시하고, 참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 수립과 오픈엑세스 전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오픈엑세스 정책문서는 <표 1>과 같다.

오픈엑세스 정책 관련 학술논문은 국내외 학

<표 1> 연구 대상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문서

코드	정책문서명	수립기관/조직	국가	주도 유형
P1	NIH 공공 접근 정책(NIH Public access policy)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미국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P2	CAS 공적자금 지원 연구 프로젝트 논문 오픈엑세스 정책 성명(中國科學院關於公共資助科研項目發表的論文實行開放獲取的政策聲明)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중국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P3	NHMRC 오픈엑세스 정책(NHMRC Open Access Policy)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호주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P4	JSPS 연구논문 오픈엑세스 추진 정책(The JSPS Policy for Implementing Open Access to Research Papers)	일본학술진흥회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	일본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P5	UKRI 오픈엑세스 정책(UKRI Open Access Policy)	영국연구혁신기구 (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영국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P6	NRF OA2021(안)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한국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
P7	독일 오픈엑세스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동 지침(Open Access in Germany-Joint Guidelin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änder)	연방교육연구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독일	국가·주정부
P8	GF 오픈엑세스 정책(The Gates Foundation's Open Access Policy)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GF)	미국	민간 재단
P9	PlanS: 학술출판물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오픈엑세스 전환 촉진(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full and immediate Open Access to scientific publications)	cOAlition S	국제	국제 협의체

술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국내 학술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오픈엑세스 정책’, ‘OA 정책’, ‘Open Access Policy’, ‘OA Policy’를 검색식으로 사용하였으며, 해외 학술논문은 WoS(Web of Science)와 Scopus에서 ‘Open Access Policy’와 ‘OA Policy’를 검색식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검색된 논문의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을 주요하게 다루고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학술논문은 <표 2>와 같다.

3.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에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문서와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오픈엑세스 정책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질적 데이터 분석 도구인 Taguette를 활용하였으며, 정책문서와 학술논문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의 수립·이행에 관한 의미 단위를 식별하였다. 이후 각 의미 단위의 내용을 대표하는 개념을 부여하여 태깅하였으며, 사전에 고정된 범주를 적용하기보다 자료에 나타난 표현과 내용을 중심으로 귀납적 코딩을 수행하여 초기 태그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에서 생성된 태그의 의미와 관계를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표현으로 생성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태그는 원자료를 대조하여 통합하였으며,

<표 2> 연구 대상 오픈엑세스 정책 관련 학술논문

논문 코드	저자(발행년)	논문명
A1	Farley(2025)	A decade of open access policy at the Gates Foundation based on experimentation, evidence and evolution
A2	Bosman et al.(2021a)	Advancing open access in the Netherlands after 2020: from quantity to quality
A3	Wakeling et al.(2022)	Free for all, or free-for-all? A content analysis of Australian university open access policies
A4	Pampel(2023)	Promoting Open Access in Research-Performing Organizations: Spheres of Activity, Challenges, and Future Action Areas
A5	Harris et al.(2024)	Plan S and Open Access (OA) in Quebec: What Does the Revised FRQ OA Policy Mean for Researchers?
A6	민윤경, 차미경(2017)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 게재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정책에 대한 연구
A7	정경희, 이재운(2023)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술지 오픈엑세스 출판 전환 사례 연구
A8	정영임, 안병균(2024)	오픈엑세스 전환계약서 분석 연구
A9	신은자(2014)	오픈엑세스 확산을 위한 APC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A10	안병균, 정영임(2025)	주요 출판사 오픈엑세스 전환계약 유형별 계약서 비교 분석
A11	정경희 외(2020)	한국연구재단 오픈엑세스 정책 실행방안 연구
A12	김소영 외(2016)	해외 공공연구기금에 의한 학술논문의 오픈엑세스 정책 분석
A13	신은자(2020)	Plan S 정책에 대비한 오픈엑세스 출판의 추진 및 과제

일부 내용이 중첩되는 태그는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통합 여부를 결정하였다. 통합된 태그의 명칭은 포함된 내용을 포괄하도록 조정하고, 태그 간 의미적 연관성과 포함 관계를 검토하여 유사한 태그를 묶고, 포괄하는 의미의 범위에 따라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계층화하였다.

이후 정책문서와 학술논문에서 각각 도출한 범주 체계를 비교하였다. 두 자료의 범주 체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범주를 대응시키고, 각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범주와 세부 내용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정책문서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범주 체계를 정리하되, 학술논문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책의 수립·이행상의 고려사항, 지원 방안 및 쟁점은 각 구성요소의 세부 내용에 보완적으로 반영하여 통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기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국가 R&D 자금지원은 기관은 오픈엑세스 정책의 수립·이행 주체이며,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비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수립 주체라 할 수 있다(정경희 외, 2020). 이에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체계 및 학술출판 환경에 비추어 검토하고, 정책의 항목과 각 항목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을 제안하였다.

초기 태그의 생성은 자료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인의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생성된 태그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태그를 조정하고 범주화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자 간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교차 검토 과정에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료의 내용과 맥락을 재검토하여 태그의 명칭과 적용 범위, 통합 여부 및 범주화 결과를 조정하였다.

4. 오픈엑세스 정책의 구성요소 도출

4.1 오픈엑세스 정책의 구성요소 범주화

앞서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각 자료에서 생성된 태그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태그를 계층적으로 범주화한 결과, 정책문서에서는 최대 4수준, 학술논문에서는 최대 7수준으로 구성된 범주 체계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는 상위 수준에서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 영역을 나타내며,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적용 대상, 조건, 방식, 절차 및 세부 고려사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학술논문에서 도출된 '수단'의 태그는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사업-전환 사업 추진 과정-세부 고려 요소-출판 및 유통-APC 책정'으로 세분화되었다. 정책문서와 학술논문에서 도출된 태그 범주를 2수준까지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정책문서와 학술논문에서 각각 도출된 범주 체계를 비교한 결과, 두 자료는 기본적인 범주 구조에서 공통성을 보였으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강조점과 세부 전개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오픈엑세스 정책의 구성요소와 태그 범주 예시(1-2 수준)

구성 요소	정책문서 태그 범주		학술논문 태그 범주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제목	제목	-	-	-
적용 시점	적용 시점	정책발효일 정책발효일 무관	적용 시점	방식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
대상 집단	대상 집단	산하기관 소속 연구자 및 대학원생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자 재단 직원	대상 집단	연구기관 정책의 대상 집단 연구비 지원기관 정책의 대상 집단
수립 기관	수립 기관	-	주체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컨소시엄 학술지
목표/의의	목표	연구 투명성 향상	배경/목표	공적 자금 지원 의무
		연구가속화		기관의 구독료 부담
		연구성과 접근성 확대		무료 접근/배포
		오픈엑세스 지원 체제 전환 마련		
		완전 오픈엑세스 학술 출판 체제 전환 가속화		
		전면적/즉시적 오픈엑세스 달성		
		협력촉진		
	의의	건강문제 해결/이해지원	의의	구독료 부담 경감
		기관의 책무		연구성과의 확산
		연구성과 전파 및 활용 촉진		
		연구성과 추적 지원		
사업화	수단 (사업화)	연구기관 자금지원	수단 (사업화)	저자 저작권 확보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대중		
		학문 공동체(연구자, 학생)		
		환자, 가족, 의료제공자		
	수단 (사업화)	연구논문 저널/플랫폼	수단 (사업화)	오픈엑세스 저널 출판
		오픈엑세스 출판		셀프아카이빙
		리포지터리 등록		해외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계약
		오픈엑세스 인프라 지원		오픈엑세스 저널 인프라
적용 대상물	적용 대상물	적용대상물 유형 [연구논문, 저널, 단행본, 책의 장, 편저서, 연구데이터, 프리프린트, 특수유형]	적용 대상물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사업
				거버넌스
집행	집행	제재	정책 준수	제재 조항
		준수 여부 모니터링		모니터링 명확한 정책 공시

구성 요소	정책문서 태그 범주		학술논문 태그 범주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기타	권리	기관의 권리	이해 관계자	연구기관
		조건		연구자
	용어 정의	약어		이용자
		용어집		학회
	문의	담당자 연락처	제도 개선	연구성과평가 개선
		문의 내용	인력	저작권
		문의 방법		직원 교육
	유관 법제	상/하위 법과의 관계	한계	확충
		유관 법과의 관계		오픈엑세스 의무화의 한계
		이전 정책과의 관계		오픈엑세스 전환의 한계
	연구자 지원	가이드라인 제공	커뮤니케이 션 · 협력	전반적 한계
			연구지원 서비스	-

* 3수준 이하의 태그 범주 생략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모두에서 ‘적용 시점’, ‘대상 집단(정책수혜자, 이해관계자)’, ‘수립기관(주체)’, ‘목표 및 의의’, ‘수단(사업화)’, ‘적용대상물’, ‘집행’이 공통적인 상위 범주로 확인되었다. 수단에서는 오픈엑세스 학술지 또는 플랫폼을 통한 출판과 리포지터리 등록을 통한 셀프아카이빙이 주요 이행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의 구축은 이행 방식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문서에서는 정책의 실제 집행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 학술논문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정책의 적용 시점과 이행 경로를 비롯하여 용어 정의, 연구자 지원 도구, 정책 준수 및 집행을 위한 방안과 문의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학술논문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조건과 구조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 정부, 연구비 지원기관, 출판사, 연구자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재정

적·조직적 기반, 학술출판 구조의 전환, 이해관계자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지속가능성 및 정책 이행에 따른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학술논문에서는 학술출판체계의 오픈엑세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정책문서보다 확장된 범주에서 논의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오픈엑세스 전환계약과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 지원 사업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4.2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앞서 수행한 오픈엑세스 정책문서와 관련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결과,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는 ‘제목’, ‘적용 시점’, ‘대상 집단’, ‘수립기관’, ‘목표/의의’, ‘사업화’, ‘적용대상물’, ‘집행’, ‘기타(용어 정의, 유관 법제, 연구자의 지원, 권리, 문의 방법)’의 9개 범주로 구분

되었다(〈표 3〉 참조).

4.2.1 제목

오픈엑세스 정책문서의 명칭으로, 정책의 책임 주체와 대상 및 성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책문서의 제목에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표한 주체의 이름과 정책의 주제(오픈엑세스)가 함께 제시되며(P1, P3, P5, P7), 정책이 적용되는 연구성과물의 유형을 명시하기도 한다(P2, P4). 또한 연도, 버전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P6, P8).

4.2.2 적용 시점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책발효일과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정책의 발효일과 별도로 연구비 지원계약의 체결 시점이나 연구성과물의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오픈엑세스 출판 또는 리포지터리 등록 시점과 이행 기한도 제시될 수 있다(P2-3, P5-6). 또한 정책발효일 이전에 생산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오픈엑세스 공개를 권고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P2, A2).

4.2.3 대상 집단

정책의 의무와 요구사항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개인 및 기관의 범위를 나타낸다. 연구기관의 정책에서는 소속 연구자뿐 아니라 직원, 학생, 기관의 관계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A3),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에서는 연구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P2, P5-6, P8-9). 즉, 정책의 주체와 지원 관계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의 범위가 설정된다.

4.2.4 수립기관

오픈엑세스 정책을 제정·공표하고 정책의 시행과 관리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나타낸다. 국가 및 주정부(P7), 국가·공공 연구비 지원기관(P1-P6), 민간재단(P8), 대학·연구기관(A3)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합체(P9, A13) 등이 주요 주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정·공표한 기관뿐 아니라 정책의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협력 주체를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4.2.5 목표·의의

오픈엑세스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서론, 배경, 목적 등 문서 전반에 걸쳐 제시되며(P3, P5, P7), 별도의 장에서 기술되기도 한다(P1, P4, P6, P8-9). 또한 연구자, 학술공동체, 산업계 및 일반 대중 등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정책수혜자를 함께 제시하여 정책이 지향하는 수혜 범위와 공공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P1-4, P7-8, A3). 주요 목표로 는 연구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이용의 보장, 즉각적인 오픈엑세스의 실현, 지속가능한 오픈엑세스 전환 및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제시된다(P7-9, A2). 이와 함께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성·접근성 확대, 학술·연구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 공적 연구비에 대한 책무와 기관 사명의 실현 등이 정책의 의의로 제시된다(P1, P4, P6, P8-9, A11).

4.2.6 사업화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제도적 수단을 나타내며, 정책

적용 대상 집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행 장치에 해당한다.

사업화는 크게 오픈엑세스 이행 방식(경로)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으로 구분된다. 오픈엑세스 이행 방식은 주로 '학술지/플랫폼을 통한 오픈엑세스 출판'과 '리포지터리 등록(셀프아카이빙)'의 두 가지로 나타나며, 오픈 라이선스 적용 및 연구비 지원 사사표기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P1, P3, P5-6, P8, A11-13).

먼저, '학술지/플랫폼 오픈엑세스 출판'은 주로 VoR을 오픈엑세스 학술지나 출판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완전 오픈엑세스 학술지/플랫폼에 출판하여 출판과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이 주요 경로로 제시되며, 엠바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된다(P3, P5-6, A12-13). 하이브리드 학술지를 통한 출판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전면적 오픈엑세스로의 전환 계획을 갖춘 전환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P3, P7, P9). 한편, 약탈적 학술지에 해당하거나 더블 딥핑의 위험이 있는 등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출판 경로는 제한되기도 한다(P3, P6). 오픈엑세스 출판에 수반되는 APC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 부담 주체 및 지원 방식이 규정되며, 연구비 지원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지원, 전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P3, P5, P7-8, A8-11, A13).

그리고 '리포지터리 등록'은 연구자가 연구논문의 AAM 또는 허용된 VoR을 기관·주제 기반 리포지터리에 기탁하여 오픈엑세스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AAM 기탁을 기본으로 하며, 정책이나 출판사의 조건에 따라

VoR 기탁 또는 일정한 엠바고 이후의 공개가 포함된다(P3-5, A3, A6, A11-12). 기탁 대상은 기관·주제 리포지터리 또는 정책 수립기관이 지정한 리포지터리로 제시되며, 해당 리포지터리는 접근성, 검색 가능성, 재이용 가능성 및 장기 보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1, P2, P5-6, P8-9, A11-13). 이와 함께 공개 시점과 적용되는 엠바고의 기간 및 조건, 저작권·법적 사유에 따른 예외 등의 요건이 제시된다(P4, P6, A3, A11-12). 특히 리포지터리 등록에서는 기탁 시점과 공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연구자의 정책 이해와 이행에 효과적이며, 정책 준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A3).

오픈엑세스의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오픈엑세스 학술지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제시된다. 이는 오픈엑세스 학술지와 출판 플랫폼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과 리포지터리 및 유통 기반의 확충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괄한다(A7, A11, A13). 연구비 지원기관 차원에서는 연구자가 오픈엑세스 출판 경로를 원활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엑세스 학술지/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과 재정 지원이 강조되며(P9, A13), 국가 차원에서는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학술기관 주도의 비영리 인프라 확충, 연구평가체계 개선 및 출판비용의 투명성 확보 등 학술출판 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P7, A2, A4).

이와 같은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은 개별 기관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책의 이행에 관여하는 주체 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가 함께 다루어진다. 거버넌

스는 오픈엑세스 정책과 전략의 효과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해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수행기관, 도서관, 행정부서 및 정보인프라 부문 간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고, 기관 간 정책의 정합성과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자의 정책 준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A4-5). 이에 따라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제시되며(P3-4, P7-8, A4-5), 국가 정책 및 국제적 오픈엑세스 체계와 연계하여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P2, A2, A13).

나아가 이러한 이행 방식과 지원체계가 일시적인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제화는 오픈엑세스 정책의 집행과 책임 구조를 규칙·세칙·지침 및 규제 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 및 유관 부서에 세부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P2). 정부 차원에서는 오픈엑세스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규제적 여건을 마련하거나 검토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오픈엑세스 전략과 정책, 관련 인프라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P7).

4.2.7 적용대상물

오픈엑세스 정책이 적용되는 연구성과물의 유형과 범위를 나타낸다. 핵심 대상은 연구비 지원을 통해 생산된 동료평가 학술논문이며, AAM, VoR 등 공개가 인정되는 형태가 제시된다(P4-6, P8). 이와 함께 단행본, 책의 장(book chapter),

편저서(edited collection), 연구데이터와 같은 특수 유형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p3, p5). 이러한 연구성과물은 유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P5). 한편, 프리프린트는 대부분의 경우, 공개가 장려되지만, 정식 오픈엑세스 의무 대상과는 구분된다(P5). 또한 윤리적 제약과 같은 정당한 사유로 공개가 곤란한 연구성과물은 적용 또는 공개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P3, P5, P8). 아울러 정책에 따라 현 단계의 우선 적용 대상과 향후 확대 대상을 구분하여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P5-6).

4.2.8 집행

오픈엑세스 정책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비준수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제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링은 정책 대상이 되는 연구자와 기관의 오픈엑세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오픈엑세스 전환의 진척 정도, 기관의 지원 수준 및 출판비용의 변화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을 포함한다(P3, P5, P8-9). 나아가 일부 정책에서는 초기·중견 경력 연구자 등 특정 연구자 집단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정책 시행에 따른 부수적 효과를 함께 평가한다(P3).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한편(A1), 비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연구비 지원 결정에 이를 반영하고 지원 절차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물을 연구실적에서 제외하거나 향후 일정 기간 연구비 공모 참여를 제한하

는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P1, P6, P8-9). 이처럼 집행은 정책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환류함으로써 오픈 액세스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2.9 기타

오픈엑세스 정책의 직접적인 이행 방식과 집행 장치 외에, 연구자의 정책 이해와 이행을 지원하고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보완적 내용은 정책의 의미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한다.

먼저 정책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와 약어를 정의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용어 정의는 본문 또는 별도의 용어집으로 제시할 수 있다(P1, P3, P5-6).

다음으로 정책의 수립과 적용의 근거가 되는 상위 정책과 법제, 연구비 지원계약 관계, 기관 내·외부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정책의 제도적 근거와 함께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P1, P3-5, P8-9).

또한 연구자가 적절한 출판 및 공개 방식을 선택하고 정책 준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술지 선택 지침, 약탈적 학술지의 안내 및 오픈엑세스 준수 확인 도구 등이 해당하며, 연구자가 정책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출판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P3).

연구성과물의 공개와 이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복제·배포하고

공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 권한을 규정하기도 한다(P1). 그리고 다수의 정책문서에서 정책의 해석이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문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의 방법에는 집행과 지원을 담당하는 책임 부서, 담당자, 연락 수단이 포함된다(P5, P8, A3).

4.3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의 항목 및 형식 제안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문서는 형식, 명칭 및 전개 방식이 상이하며, 구성요소 역시 일정한 구조로 제시되기보다 문서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책문서의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내용분석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를 실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정책 형식의 구성에는 정책 수립 및 집행 주체의 권한과 역할, 연구지원체계 및 학술출판 환경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공적 연구비 지원과 연구성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을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주체로 전제하였으며, 특히 윤종수 외(2020)에서 제안한 NRF OA2021(안)의 연구자 오픈엑세스 이행 의무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목표와 적용 대상, 이행 수단, 지원 및 집행체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분석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재분류하고, 일부 요소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 집단’, ‘수립기관’, ‘적용 범위’ 등의 요소는 각각 독립된 정책 항목으로 대응시키기보다는 가독성과 구조적 명확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한편 ‘용어 정의’, ‘권리’, ‘문의 방법’은 정책의 해석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한 ‘사업화’ 범주에서는 연구자의 준수 의무와 재단 또는 정부 차원의 지원 수단이 함께 다루어졌다. 이에 연구자와 정책 수립·집행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의무화’로, 한국연구재단이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적·재정적 수단은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한국형 오픈액세스 정책의 형식은 ‘제목’, ‘적용 시점’, ‘목표’, ‘용어 정의’, ‘적용대상물’, ‘의무화’, ‘지원’, ‘집행’, ‘권리’, ‘문의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한국형 오픈액세스 정책 형식의 제안 문서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정책의 형식안을 구성하는 항목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형 오픈액세스 정책 형식 항목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제목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주체인 한국연구재단의 명칭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오픈액세스를 함께 제시하여, 정책의 책임 주체와 성격을 분명히 한다.
적용 시점	정책발효일과 정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 적용대상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목표	한국연구재단이 오픈액세스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용어 정의	정책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용어와 약어의 의미 및 범위를 제시하고, 정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적용대상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체계와 국내 학술출판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초기 단계에는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기타 연구성과물은 향후 제도적 여건과 정책의 정착 정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의무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산출된 학술논문에 대한 의무의 적용 시점과 범위를 제시하고, 공식 출판과 동시에 오픈액세스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픈액세스 학술지/출판 플랫폼을 통한 공개’와 ‘리포지터리 기탁’의 2가지 경로를 주요 이행 방식으로 설정하여, 연구자가 두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각 경로에는 공개 대상, 인정 가능한 학술지와 리포지터리의 범위, 연구비 지원 사실의 표기, 라이선스 등 주요 요건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출판·리포지터리 기탁 방식, 공개 플랫폼에 대한 제한 및 예외 인정 기준(하이브리드 학술지 등)을 제시하고, 저작권이나 법적 사유로 즉시 공개가 어려운 경우의 예외와 엠바고 적용 기준을 함께 명시한다.
지원	오픈액세스 제공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할 제도적·재정적 지원 사업과 운영체계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 학술지 오픈액세스 논문의 출판비용 지원,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 셀프아카이빙을 위한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운영 지원,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이 제안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자의 동의 없이 연구성과물이 AI 학습에 이용되거나 공개된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독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논문의 상업적 AI 학습 활용을 기존 오픈 라이선스만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김병준, 2025). 이에 연구자의 권리와 활용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오픈액세스 논문의 AI 학습 및 공공적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다.
집행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정책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오픈액세스 전환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비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와 보완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다.

항목	주요 내용
권리	연구자의 저작권 보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연구성과의 오픈엑세스 제공과 장기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한국연구재단이 행사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 권한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연구자가 학술논문의 기탁과 공개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제3자 저작권 자료가 포함된 경우 적용되는 권리와 이용조건 및 예외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문의 방법	정책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담당 주체와 연락 방법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정책 적용, 의무 이행 및 관련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오픈엑세스가 확산되면서, 학술정보의 개방은 개별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학술성과의 생산부터 출판, 유통, 보존,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픈엑세스 정책이 단순한 공개 원칙을 넘어, 목표와 적용 대상, 이행 방식, 지원 및 집행체계 등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에 NRF OA2021(안)이 제안된 이후 약 5년간 국내외에서는 오픈엑세스의 확대와 이행을 둘러싼 정책적·학술적 논의가 축적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 오픈엑세스 정책의 구체적인 형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국내외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는 오픈엑세스 정책문서가 어떠한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문서와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체계와 국내 학술출판 환경에 비추어 도출된 구성요소와 세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목, 적용 시점, 목표, 용어 정의, 적용대상물, 의무화, 지원, 집행, 권리 및 문의 방법으로 구성된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오픈엑세스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연구자에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픈엑세스 이행 경로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오픈엑세스 출판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기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 연구성과의 기탁과 장기 보존을 위한 리포지터리의 구축·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연구비 지원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학회 및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 등 관련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개별 지원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정책의 목표와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 조직은 정책과 지원 사업의 기획·관리, 연구자 안내와 문의 대응, 준수 여부의 확인, 관련 기관 간 협력 등을 담당함으로써 정책과 실제 이행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성과의 공개가 단순한 원문 접근에 머물지

않고 AI를 활용한 연계 및 재이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러한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의 정책문서와 학술논문을 분석하였으므로, 국가와 기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오픈엑세스 정책의 내용과 학술적 논의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며, 자료 수집 이후 이루어진 정책의 개정이나 최근의 변화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제안한 형식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 학회, 학술출판기관, 도서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한 형식의 타당성과 보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형식안은 구체적인 조문이 아니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항목과 그 관계를 구조화한 것이므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오픈엑세스 출판이 인정되는 학술지와 리포지터리의 기준, 공개 라이선스, APC 지원 범위, 예외와 제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전담 조직,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식, 리포지터리 및 연구성과 관리체계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오픈엑세스 정책과 관련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오픈엑세스 정책 형식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국내 오픈엑세스 정책의 수립과 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병준 (2025. 11. 21.). AI 시대, 연구자의 학술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원칙 제안. 지식공유연대 2025 연례 심포지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 서울.
출처: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TdGJRDpQ2Le5j4znGg4ZjyUAZLrFhrkN-46e-GgEUUpw/edit>
- 김소영, 김지현, 최희석, 황혜경 (2016). 해외 공공연구기금에 의한 학술논문의 오픈엑세스 정책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209-229. <https://doi.org/10.4275/KSLIS.2016.50.4.209>
- 민윤경, 차미경 (2017). 공공연구기금 논문성과물 게재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1), 155-176. <https://doi.org/10.3743/KOSIM.2017.34.1.155>
- 신은자 (2014). 오픈엑세스 확산을 위한 APC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249-270.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249>
- 신은자 (2020). Plan S 정책에 대비한 오픈엑세스 출판의 추진 및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3),

- 101-1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3.101>
- 심원식 (2021). 오픈엑세스 메가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국내 기관 소속 저자의 오픈엑세스 출판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4), 45-65.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45>
- 안병균, 정영임 (2025). 주요 출판사 오픈엑세스 전환계약 유형별 계약서 비교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87-11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087>
- 윤종수, 이은우, 정경희, 김일권, 최하나 (2020). 한국연구재단 오픈엑세스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 정경희, 이재운 (2023).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술지 오픈엑세스 출판 전환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271-291. <https://doi.org/10.4275/KSLIS.2023.57.2.271>
- 정경희, 이재운, 정은경, 최상희 (2020). 한국연구재단 오픈엑세스 정책 실행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 255-286.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255>
- 정영임, 안병균 (2024). 오픈엑세스 전환계약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67-291.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267>
- Bosman, J., de Jonge, H., Kramer, B., & Sondervan, J. (2021a). Advancing open access in the Netherlands after 2020: from quantity to quality. *Insights: The UKSG Journal*, 34(1), 16.
<https://doi.org/10.1629/uksg.545>
- Bosman, J., Frantsvåg, J. E., Kramer, B., Langlais, P.-C., & Proudman, V. (2021b). OA Diamond Journals Study. Part 1: Findings. cOAlition S. <https://doi.org/10.5281/zenodo.4558704>
-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BOAI) (2002, February 14). Read the Declaration. Available: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BMBF) (2023). Open Access in Germany: joint guidelin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änder. Available:
https://www.bmfr.bund.de/SharedDocs/Publikationen/DE/FS/772970_Open_Access_in_Deutschland_en.pdf?__blob=publicationFile&v=4 [cited 2025.10.02.]
- Chinese Academy of Sciences(CAS) (2014). 中國科學院關於公共資助科研項目發表的論文實行開放獲取的政策聲明. Available: <https://bdt.semi.ac.cn/library/contents/722/1131.html> [cited 2025.09.22.]
- cOAlition S (2018, September 4). Why Plan S. Available:
<https://www.coalition-s.org/why-plan-s/>
- cOAlition S (2019, May 31). Principles and implementation. Available:
<https://www.coalition-s.org/addendum-to-the-coalition-s-guidance-on-the-implementation-of-plan-s/principles-and-implementation/> [cited 2025.09.04.]

- Consortium of the DIAMAS Project (2024, September 20). The Diamond OA Standard (DOAS) (Version 1.2). Zenodo. <https://doi.org/10.5281/zenodo.13820036>
- Crowfoot, A. (2017). Open access policies and Science Europe: State of play. *Information Services & Use*, 37(3), 271-274. <https://doi.org/10.3233/ISU-170839>
- Farley, A. (2025). A decade of open access policy at the Gates Foundation based on experimentation, evidence and evolution. *Insights: The UKSG Journal*, 38(1), 3. <https://doi.org/10.1629/uksg.690>
- Gates Foundation(GF) (2025). The Gates Foundation's open access policy. *Gates Open Access Policy*. Available: <https://openaccess.gatesfoundation.org/open-access-policy/2025-open-access-policy/> [cited 2025.09.22.]
- Hamad, S., Brody, T., Vallières, F., Carr, L., Hitchcock, S., Gingras, Y., Oppenheim, C., Stamerjohanns, H., & Hilf, E. R. (2004). The access/impact problem and the green and gold roads to open access. *Serials Review*, 30(4), 310-314. <https://doi.org/10.1080/00987913.2004.10764930>
- Harris, R., Lange, J., & Lasou, P. (2024). Plan S and open access (OA) in Quebec: what does the revised FRQ OA policy mean for researchers?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9(1), 35-57. <https://doi.org/10.18438/ebliip30413>
-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JSPS) (2017). The JSPS policy for implementing open access to research papers. Available: https://www.jsps.go.jp/file/storage/open_science/policy_open_access.pdf [cited 2025.09.22.]
- Larivière, V. & Sugimoto, C. R. (2018). Do authors comply when funders enforce open access to research? *Nature*, 562, 483-486. <https://doi.org/10.1038/d41586-018-07101-w>
- Max Planck Society (2023, June 14). Final statement of the 16th Berlin OA conference. *Max Planck Open Access*. Available: <https://openaccess.mpg.de/b16-final-statement>
-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NHMRC) (2022). NHMRC Open Access policy. Available: https://scholar.google.com/mandates/nhmrc_au-2022-09-19.pdf [cited 2025.09.26.]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 (2024). NIH public access policy. *NIH Public Access*. Available: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OD-25-047.html> [cited 2025.09.08.]
- Pampel, H. (2023). Promoting open access in research-performing organizations: spheres of activity, challenges, and future action areas. *Publications*, 11(3), 44. <https://doi.org/10.3390/publications11030044>
- Pinfield, S., Salter, J., & Bath, P. A. (2016). The “total cost of publication” in a hybrid open-access environment: institutional approaches to funding journal article-processing charges

- in combination with subscription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7(7), 1751-1766. <https://doi.org/10.1002/asi.23446>
- Rodrigues, M. L., Savino, W., & Goldenberg, S. (2022). Article-processing charges as a barrier for science in low-to-medium income regions. *Memórias do Instituto Oswaldo Cruz*, 117, e220064. <https://doi.org/10.1590/0074-02760220064>
- Schimmer, R., Geschuhn, K. K., & Vogler, A. (2015). Disrupting the subscription journals' business model for the necessary large-scale transformation to open access. *Max Planck Digital Library*. <https://doi.org/10.17617/1.3>
- Suber, P. (2012). *Open Access*. Cambridge, MA: MIT Press.
<https://doi.org/10.7551/mitpress/9286.001.0001>
-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 (2025, February 10). UKRI open access policy. Available: <https://www.ukri.org/publications/ukri-open-access-policy/> [cited 2025.09.03.]
- Wakeling, S., Kingsley, D., Jamali, H. R., Kennan, M. A., & Sarrafzadeh, M. (2022). Free for all, or free-for-all? a content analysis of Australian university open access policies. *Information Research: 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27(2), paper 933.
<https://doi.org/10.47989/irpaper93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Byoung Goon & Jung, Young Im (2025). A comparative analysis of open access transformative agreements from major publis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1), 87-11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1.087>
- Joung, Kyoung Hee & Lee, Jae Yun (2023). A case study on converting journals to open acces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archival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271-291.
<https://doi.org/10.4275/KSLIS.2023.57.2.271>
- Joung, Kyoung Hee, Lee, Jae Yun, Chung, Eun Kyung, & Choi, Sang Hee (2020). A study on methods of implementation for the NRF open access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4), 255-286.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255>
- Jung, Young Im & An, Byoung Goon (2024). Study on open access transformative agree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267-291.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267>

- Kim, Byung Jun (2025, November 21). Proposed principles for establishing researchers' academic data sovereignty in the AI era, 2025 Annual Symposium of the Knowledge Sharing Alliance, National Library of Korea Digital Library, Seoul, Korea. Available: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TdGJRDpQ2Le5j4znGg4ZjyUAZLrFhrkN-46e-GgEUpw/edit>
- Kim, So Young, Kim, Ji Hyun, Choi, Hee Seok, & Hwang, Hye Kyong (2016). An analysis of open access policies for publications funded by overseas public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209-229.
<https://doi.org/10.4275/KSLIS.2016.50.4.209>
- Min, Yoon Kyung & Cha, Mi Kyeong (2017). A study on the open access policy of scholarly journals publishing research paper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155-176.
<https://doi.org/10.3743/KOSIM.2017.34.1.155>
- Shim, Won Sik (2021).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open access publishing among Korean authors of an open access mega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4), 45-65.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45>
- Shin, Eun Ja (2014). A study on APC subsidy policies to encourage open access publis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249-270.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249>
- Shin, Eun Ja (2020). Challenges and tasks of open access publishing for Plan S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3), 101-1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3.101>
- Yoon, Jong Soo, Lee, Eun Woo, Joung, Kyoung Hee, Kim, Il Kwon, & Choi, Ha Na (2020). A Study on establishing an open access policy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부록] 한국형 오픈엑세스 제안 형식(안)

항목	내용(제안)
제목	한국연구재단 오픈엑세스 정책
적용 시점	본 정책은 [발효일]부터 시행되며, [특정일자/발효일]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되는 연구과제와 그로부터 산출되는 학술논문 성과물에 적용한다.
목표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오픈엑세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본 정책의 근본적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비 지원기관, 정부 부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한국연구재단은 국제 학술 커뮤니티, 해외 연구비 지원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오픈엑세스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협력 연구에서 생산된 성과물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학술논문이 출판 즉시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엑스로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는 연구성과의 접근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식 확산과 학술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연구 환경이 안정적으로 오픈엑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 '학술논문성과물'은 연구개발 성과물 중에서 논문을 말한다. 'APC'는 ..., '전환계약'은 ...]
적용 대상물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 산출된 학술논문으로, 학술지 또는 ISSN이 부여된 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을 포함한다. 정책 적용은 공식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논문이 출판되는 즉시 오픈엑스로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성과물이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에 생산되었는지, 과제 종료 이후에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물은 모두 본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행본, 연구데이터 등 기타 연구성과물은 현 단계에서는 본 정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되, 향후 연구 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책 또는 지침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의무화	한국연구재단은 학술논문의 오픈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재단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학술논문을 출판할 때 준수해야 할 오픈엑세스 제공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의무는 [발효일] 이후 선정되는 연구과제 및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학술논문에 적용된다. 정책 적용은 공식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자가 생산한 학술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즉시 오픈엑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술논문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에 생산되었는지 또는 과제 종료 후에 생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본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작권 또는 기타 법적 사유로 인해 즉시 오픈엑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연구자는 본 정책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오픈엑스 제공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경로 1]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통한 오픈엑세스 제공: 연구자는 재단의 지원을 통해 산출된 학술논문을 가능한 한 완전 오픈엑스 학술지 또는 오픈엑스 출판 플랫폼에 출판해야 하며, 논문은 공식 출판 즉시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학술논문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적용에 관한 사항/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술지(약탈적 학술지 등)에 관한 사항]. [경로 2] 리포지터리 기탁을 통한 오픈엑세스 제공: 연구자가 오픈엑스 저널에 출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술논문의 최종출판본(VoR) 또는 저자승인원고(AAM)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리포지터리 또는 재단이 지정한 공인 리포지터리에 기탁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오픈엑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 보존·큐레이션·메타데이터 관리 등 필수적 관리 기능을 갖추지 않은 플랫폼(해적 사이트, 학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은 인정되는 리포지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타 일자와 예외에 관한 사항(엠바고 등)]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학술논문에 대하여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사사표기 문구 등]

항목	내용(제안)
지원	① 국제 학술지 오픈엑세스 논문의 출판비용 지원 사업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오픈엑세스 출판을 촉진하고, 출판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학술지 오픈엑세스 APC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연구자가 국제 학술지에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APC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지원 방식은 전액 지원, 학술지 등급별 차등 지원, 출판사 환급 방식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재단의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기관·학회·컨소시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오픈엑세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오픈엑세스 출판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과도한 APC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APC 항목 및 금액 기준을 정비하며,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학술지에 대한 지원 제한 방안 검토, 학술지별 APC 공시·비교를 통한 투명성 확보, 출판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비용 적정화 유도 등 지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한다. ②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 지원 사업 오픈엑세스 출판 의무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회의 학술지 발행 현황을 고려하여, 구독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오픈엑세스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오픈엑세스 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각 학회가 자신의 운영 구조와 유통 환경에 적합한 오픈엑세스 유형과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오픈엑세스 전환 지원 대상 학술지를 평가 기준에 따라 검증한 후 지원을 제공한다. 재단이 수행하는 학술지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에 오픈엑세스 전환 여부와 학회의 재정 공개 여부를 평가 요소 또는 가산점으로 반영하여, 오픈엑세스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를 지원한다. 또한 오픈엑세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오픈엑세스 출판 학회와 연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학회 규정에 저작권 귀속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논문 및 유통 플랫폼에 적절한 라이선스를 등록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술지에 대해서는 재단 차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오픈엑세스 전환 비용뿐 아니라 오픈엑세스 출판을 위한 유통 플랫폼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논문 투고부터 원문 공개 및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플랫폼은 오픈엑세스 전환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도 원문 또는 접근점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③ 셀프아카이빙을 위한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 운영 지원 사업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성과의 축적, 공개, 장기 보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셀프아카이빙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술논문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논문 원문, 메타데이터, 라이선스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픈엑세스 리포지터리를 구축·운영하거나, 연구자들이 셀프아카이빙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리포지터리를 지정한다. 리포지터리는 장기 보존, 큐레이션, 버전 관리, 오픈 라이선스 처리 등 지속적인 관리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리포지터리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운영기준, 기술적 요건, 기탁 절차 및 검증 기준 등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오픈엑세스 논문의 AI 활용 지원 사업 한국연구재단은 오픈엑세스로 공개된 학술논문 성과물이 공공적 목적의 AI기반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 학습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본 사업은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권리 보호와 책임 있는 AI 활용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기금을 통해 생산되고 오픈엑세스로 공개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AI 학습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연구데이터 등 기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또는 후속 지침을 통해 적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오픈엑세스 출판과 AI 학습 활용을 구분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학술논문이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이러한 동의 여부를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AI 학습에 활용되는 학술논문의 이용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오픈 라이선스 정보와 AI 학습

항목	내용(제안)
	활용 여부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며, 필요 시 관련 표준의 개발 또는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오픈엑세스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성과의 공공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을 지향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국제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후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⑤ 오픈엑세스 출판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운영 위원회 등) 운영 지원 사업 한국연구재단은 오픈엑세스 출판 지원 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영과 정책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과 조율을 담당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본 거버넌스는 오픈엑세스 출판 비용 지원,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 리포지터리 운영 등 재단이 수행하는 관련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지원, 학술정보 유통, 연구성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거버넌스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본 거버넌스는 오픈엑세스 출판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오픈엑세스 출판과 관련된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적용 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둘째, 오픈엑세스 학술지 및 출판 플랫폼의 정책 적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약탈적 학술지 등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출판물에 대한 관리 방향을 협의한다. 셋째, 구독 기반 학술지 및 오픈엑세스 전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전환계약을 통한 오픈엑세스 출판이 정책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조율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오픈엑세스 논문의 출판 및 공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정책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오픈엑세스 출판 지원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자·학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오픈엑세스 출판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거버넌스의 운영 방식과 구성은 정책 추진 단계와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집행	한국연구재단은 본 정책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정책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은 오픈엑세스 제공 여부, 기탁·출판 시점, 사사표기 준수 여부, 라이선스 표기 적정성 등 본 정책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정책 준수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연구기관의 이행 상황, 정책의 효과성, 오픈엑세스 전환의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책 비준수 사례가 확인된 경우 재단은 연구자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보완 절차를 안내한다. 본 정책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재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한국연구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연구비 지원 제한: 정책에서 정한 오픈엑세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자는 해당 학술논문의 최종 출판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 연구비 집행 또는 후속 지원 보류: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비준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향후 연구비 집행 또는 후속 지원(예: 후속 연차 지원 등)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 연구실적 반영 제한: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학술논문은 향후 연구비 신청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기관 단위 조치: 반복적인 비준수 사례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모니터링 강화, 별도 지도·점검, 지원 제약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리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성과의 장기 보존과 공적 활용, 오픈엑세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비독점적·무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이 사용권은 해당 학술논문을 재단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또는 공인된 저장소에 보관·공개·장기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행사된다. 연구자는 본 정책에 따라 산출된 학술논문의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다. 다만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수락한 시점부터, 연구자는 해당 연구성과물이 오픈엑세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AAM 또는 VoR을 리포지터리에 기탁·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학술논문에 제3자 저작권 자료(도표, 이미지, 데이터 등)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권리·이용조건은 권리자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자 저작권 자료는 관련 허가가 없는 경우 오픈엑세스 제공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구자는 해당 자료의 이용 허가 또는 대체 자료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의 방법	본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한다. [전담 부서/담당자 정보/이메일/전화]

